

##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기영 | 대한총의회 중앙회 회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교회에서 노인들에게 현금 500원씩을 나누어 주는데 수백명이 줄을 서고, 점심한 그릇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수백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소위 국민소득 이만불 11위 경제대국의 부끄러운 노인복지 현실이다. 어찌 국가의 빈약한 복지 정책만 탓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연장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노인 복지 정책에 힘을 쓰고 있으나 국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가 이탈리아 25%, 일본 독일 스웨덴 23%,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21% 정도이지만 선진국들처럼 노인 복지 정책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노인들도 고통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나라 평균 수명도 남자 70세 여자 78세를 넘은지 오래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인류의 시조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니 과학의 발달로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식량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인생은 60부터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며 즐거움도 소멸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노인세대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자식들 교육에 모든 희생을 바친 사람들로서 자기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쓸 줄도 몰랐고 오로지 자식들만 생각하고 근검절약하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으니 가족들이나 사회로부터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60세에 퇴직을 하고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을 직업 없이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프겠는가.

현재도 경제활동 인구 5명이 노령자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부담스러운 실정인데 노령인구 부양 대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 가임여성 출산율이 1.3명으로 얼마 가지 않아 경제활동 인구 수보다 노령인구가 많아진다면 생산성 저하와 국가 재정의 악화로 국가 파탄이 가능성도 예측해 본다.

작년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약 397만여 명으로 그 중 53%는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제외하고 재가노인

40만여 명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5만여 명은 장애인들로 병고에 시달리며 외롭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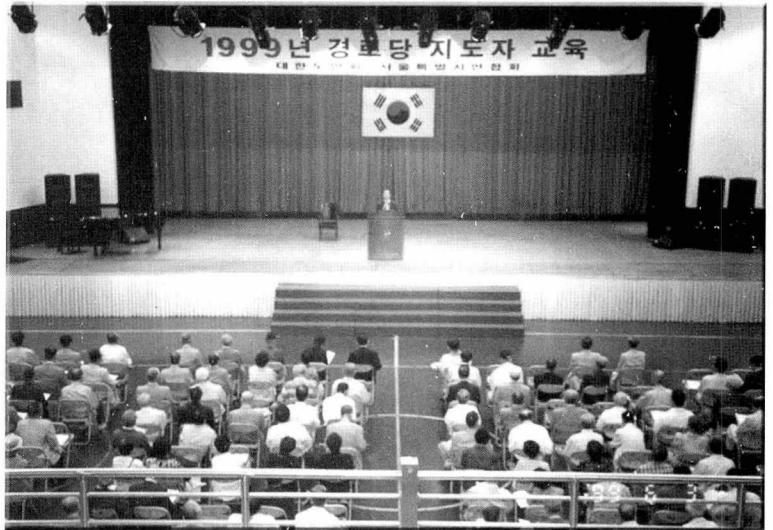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노인 복지 정책이 정착된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나 각국 공무원 연금제도 의료 보험 문제등을 시급히 대폭 개편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취업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조차도 없는데 논의 대상이 되겠는가. 자식들의 부양문제는 당연한 도리이겠으나 일자리 얻기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 현실이니 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은 누구나 모두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개인보험, 투자등으로 젊을 때부터 절약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할 때, 애지중지 길렀던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때 일자리도 없는 노인에게 국가의 복지제도가 미흡하거나,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면 노후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가 생각해 본다.

수년 전 경료효친사상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50조 51조 수당 규정중 노부모 부양자 소득공제 대폭 인상과 공무원 사원 채용 시 노부모 부양자 가점제도를 건의하여 일부는 채택되어 시행중이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노부모 모시는 자녀들에게 신분상이나 경제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적극 추진되고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치 않을 때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인가, 법적으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인가도 검토하여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윤리도덕이 붕괴되었다면 당연히 비인간화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윤리 판단 기준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가사회, 기업, 윤리 등 윤리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초라한 노인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보자.



#### 약력

청와대 행정수석 보좌관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 퇴임)  
대한노인회 지도교수  
한국경제협회 사무총장  
(사)충효국민운동본부 부총재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한총의회 중앙회 회장